

한동훈 '버티기'에 친윤계 반발... 탄핵 후 보수 내홍 심화

최고위원 사퇴 속 직무 수행 논란
친윤계·홍준표·김태홍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 임명권 갈등 예고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직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해 보수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진 최고위원,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퇴했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1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나,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나와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원들이 재신임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따지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총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6일에 다시 의총을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상실되는데, 한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진 의원이나 원의 인사들은 한 대표를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첨부된 언론 기사 63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으며, 한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홍 충남지

사도 목소리를 냈다. 홍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동귀여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 할뿐"이라고 했다. 김태홍 지사는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해야 거부했는데 탄핵도 하지 말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게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친윤들 대답 좀 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고 한다. 조금씩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탄핵심판대 오른尹 대통령... 내란죄 쟁점, 신속한 결론이 '관건'

현재,尹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개시
접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
문형배 권한대행 "공정한 재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

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현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범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현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났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

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현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현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이탈표, 8년 만에 62표서 12표... 분열 줄이고 결속 선택

대안 없는 현실 속 보수 생존 본능
보수 궤멸 공포로 형성된 공감대
영남권 중심 탄핵 트라우마 작용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시 탄핵안에 찬성한 인원은 234명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62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2024년 12월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2명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

우마'가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찌됐든 탄핵은 보수층의 궤멸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는 앞선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표가 적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인 2004년 3월에는 표결에 참석한 195명 중 193명이 찬성(당시 재석의원은

272명)했다. 그리고 12년 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99명 중 234명이 찬성을 선택했다.

특히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수 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71석이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합세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 당시 이탈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 62명이다.

당시 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커진 상태였고, 양쪽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게다가 여당은 128명으로, 20명 이상이 탈당해도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여론에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라는 대권 잠룡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탈당한 후보수 내에서의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었다. 대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도 야6당이 정당간 연대를 했고 여당 내부의 찬성론도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까지 밝혔다. 하지만 2016년과 다르게, 원내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비중은 차이가 컸다. 양 계파간 세력의 차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친윤계를 포함한 영남권 의원들은 보수진영의 '탄핵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었다.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은 현재 3선 의원이 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탄핵안 투표에도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는 다르게 더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는 몇주간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흘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만큼 여론의 분노가 크므로, 보수 진영 '절멸'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 기자